

#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 vs “사법부 공정·신뢰성 추락”

야당

여당

## 여야 정치권 공방

권영세 “무죄추정·방어권 무너져”  
김성희 “윤, 공권력과 충돌 조장”  
법원 폭동…“과잉진압” “내란폭동”

여야는 19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고리로 사법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이 원칙인데,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이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대부분이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다”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재작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진행돼야 한다. 고무줄 잣대가 되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앞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다.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성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수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보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은 구속을 피하면 언제든 다시 내란을 시도할 ‘확신범’”이라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 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 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야당의 내란’을 일러바치고 오겠다는 윤상현, 나경원도 체포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크고 엄중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윤 대통령에게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처벌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진압 과정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에게 충돌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불법 폭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며 “더 이상 물리충돌, 물리폭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시민 여러분들은 자제해주시기를 잔곡히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반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 가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충분히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김성희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내란 일당과 전광훈 동조 세력에 경고한다”며 “폭력을 불사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폭거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최 대행에게는 “내란 동조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며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란 잔존 세력에게 분명한 공권력의 위엄을 보이길 바란다”며 “주동자와 난입 폭도, 배후세력들을 모두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정진석 “안정적 국정운영에 역할 다해야”

### 대통령실,尹 구속 후 수석회의

대통령실은 1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 안보실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 비서실장은 참모들에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가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수석회의의 결과를 전하면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새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에는 직접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기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조국혁신당 “제2의 내란 사태… 전원 구속해야”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 “제2의 내란 사태”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며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데 이어 제2의 내란 사태”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 “법원 폭동 사태, 국민의힘도 책임 못 피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구타하는 등 마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정치폭력, 정치테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이고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높이 살 만하다”고 칭찬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 저항권 운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통령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했던 사람들도 있다”며 “이런 (선전·선동) 상황들이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를 야기한 원인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어떤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우원식 “헌법·법치주의 정면 부정한 중대 범죄”

### 폭동 사태 엄중 처벌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구속 전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라며 조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 국회의장 입장문’에서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공격 받았다”며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며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됩니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

며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지금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가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